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2026년 국정감사 농해수위 주요 쟁점 I '26-10-7 국회

[농지 정책]

- 농지 전수조사, 여야 공동 질타에 장관 “준비 미흡” 인정
 -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·거래 절벽·처분 우려 등 현장 불안에 여야 모두 준비 부족, 절차 순서 지적
 - 농지은행·농지연금 신청 대기 적체, 담보가치 하락, 농지담보 신규 대출 33.1% 감소 등 후속 장치 없는 조사 강행 비판
 - 야당은 기본조사가 끝난 만큼 전면 중단과 특별조치법 선행을 요구, 여당 일부는 30년간 달라진 농촌 현실에 맞춘 제도개선을 위해 기초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
 - 장관은 농지 몰수 계획은 없으며 고령·상속·질병·임대차 등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다고 답변, 비경작·투기 농지 중심 조사 전환 검토 의사를 밝힘
- ❖ 종합감사(10.22.) 전 조사 결과 분류 보고에서 처분 제외 범위와 특별조치법·농지법 개정 방향이 구체화되는지가 신뢰 회복의 관건
- 농지조사용 드론 65대, 보안성 검토 없이 중국산 도입 논란
 - 농지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직접 구매한 65대가 보안성 검토 없이 모두 중국 제품으로 계약되고,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일부가 러시아산이라는 지적
 - 촬영용역 계약분(29대)은 과업지시서에 보안 규정이 있으나 직접 구매분은 해당 규정 없음. 보안 기능으로 제시된 로컬데이터모드(LDM)도 제조사 자체 앱 기능에 불과
 - 장관은 영상자료를 외부 전송 없이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안 재점검 및 국산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약속
- ❖ 국토 공간정보를 다루는 농업 조사 인프라 전반에 대한 보안 검증 체계 마련 필요

[농업 통상]

-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, 농업 분야 영향평가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
 - 대통령의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, 산업부 주도 추진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식품부가 배제됐으며, 농식품부가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
 -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 공론화 이후 산업부·농식품부 대응 엇갈림, 9월 4일 산업부 주최 농업계 전문가 간담회에 농식품부 장관이 불참
 - 장관은 “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”며 쌀 등 초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
- ❖ 재검토 시 농업 부문 시장개방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와 피해보전 대책 마련 구체화와 부처 간 협의체계 정비 필요

[식품산업·유통]

- 설탕·밀가루 담합 CJ제일제당·삼양사 대표, 국감서 공개 사과
 - 공정위 제재*를 받은 식품 원재료 담합과 관련 CJ제일제당·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
- *공정위 과징금: 설탕 약 3,960억원, 밀가루 6,710억원, 전분·전분당 7,476억원(관련 매출 약 15조원)
- 양사는 제분·제당협회 탈퇴, 경쟁사 접촉 사전·사후 보고, 가담 임직원 인사조치, 임직원 책임의 복무규정·취업규칙

명시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 제시

- 2022년 제분업계 등에 약 550억원의 안정자금과 할당관세·저리융자를 지원한 농식품부의 관리 책임 제기,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 권한이 없다고 답변
- ❖ 정책자금 지원 식품기업에 대한 농식품부 사후관리 권한을 입법으로 마련하겠다는 언급이 나온 만큼 후속 법안 추진 여부 주목
-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, 대형마트 쏠림 지적
 - 올해 9월 말까지 투입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4,267억원(전년 대비 약 2배) 중 698억원이 이마트 한 곳에 집중되는 등 대형 유통업체 중심 집행 지적
 - 이마트 지원액은 전년(212억원)의 약 3배로 대형마트 지원액의 41%인 반면, 로컬푸드 직매장(59억원)과 친환경 매장(98억원)은 합산 3.7%에 그침
 - 생산자 차액 보전, 채널 선택형 바우처·쿠폰, 업체별 지원 상한제, 중소 유통 최소 배분 등 개선 요구에 장관은 판매 실적 기반 사후정산 구조 때문이라며 종합감사 전 개선안 보고 약속
- ❖ 물가 대응 예산이 생산자와 중소 유통에 돌아가도록 정산·배분 구조 개편 검토 필요

[농촌 정책·현장 제도]

- 농어촌 기본소득, 지방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 확대 요구
 - 시범사업 지역 확대 및 국비 비율을 높일 계획(40%→50%)이나, 재정이 열악한 군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지적.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방비 부담 완화와 국비 부담률 상향 요구
 - 지급 범위 확대와 차등 지원,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 지역 문제 등 제도 설계 보완 필요성도 제기
 - 장관은 중앙정부 부담률 상향,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, 기금 방식 설계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
- ❖ 내년 확대 시행에 앞서 국비·지방비 분담 기준과 지원 대상 설정 원칙 정비 필요
- 외국인 계절근로제, 농식품부 책임 관리 강화 요구
 -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농정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나, 법무부 소관·지자체 협약 방식이라 농식품부 역할이 부재하다는 지적
 - 고용허가제처럼 산업인력공단 모델을 활용해 상대국 공공기관과 모집·교육·송출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, 브로커를 배제하자는 제안에 장관은 협력 방안 검토 답변
- ❖ 농정원 전문기관 체계의 내년도 예산 확보와 송출국 협력 방식 확정 여부 지속 점검 필요
- 영농형 태양광,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, 축산 경영부담 등 현장 제도개선 요구
 - (영농형 태양광) 금융·유지관리·철거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정보 제공, 재생에너지 서비스 기업(RESCO) 평가·사후 관리 강화 및 농협 참여 요구
 - (농협·농지연금) 조합원 직선제 도입 찬반 논의, 지역본부별 농지연금 선정률 편차(최고 97%, 강원 21.6%) 개선 요구
 - (축산) 양돈 약취 저감시설 의무화와 연계한 축사 증축·병합 허용 축산법 개정 예고, 도축장 농사용 전력 적용 및 소 등급판정 수수료 구조 개선 요구
- ❖ 농협(10.16.)·종합감사(10.22.)에서 관련 쟁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후속 보고 내용 확인 필요